일본 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의안 번호	1008

발의년월일 : 2019년 8월 21일

발 의 자 : 박순규, 김용석, 신원철, 서윤기, 강대호, 강동길, 경만선, 고병국, 권순선, 권영희, 김 경,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동식, 김상진, 김상훈, 김생환, 김수규, 김용연, 김인제,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종무, 김창원, 김춘례, 김태수, 김태호, 김평남, 김혜련, 김호진, 김호평,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봉양순,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오중석, 오한아, 오현정, 우형찬, 유 용, 유정희, 이경선,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준형, 이태성, 이현찬,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술, 정진철, 조상호,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 선, 최영주, 최웅식, 최정순, 추승우,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김소영, 권수정, 김진수, 김소양, 성중기, 여 명, 이석주, 이성배 의원 (110명)

1. 주 문

○ 서울특별시의회는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세계 자유무역질서를 퇴보시키는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정부와 서울시는 일본의 명분 없는 경제보복조치로부터 관련 기업과 국민을 보호하며 일본에 엄중히 대처할 것을 촉구함.

2. 제안이유

○ 최근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경제 주력상품의 핵심소재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내리고, 이어 일본과의 수출협력 우대국가를 의미하는 백색국가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한국을 제외하는 등 대한민국 미래 성장을 저해하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침략에 나섰음.

○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WTO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부당하고 보복적 성격의 경제침탈로, 경제협력과 우호관계를 기반으로 한 국제사회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 따라서 한일 양국의 협력관계와 국제 규범 및 무역질서를 무너뜨리는 일본의 보복적 수출규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와 서울시는 이번 경제침략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함.

3. 이 송 처

○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교육감

일본 정부의 경제침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최근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경제의 주력상품인 반도체와 TV・스마트폰 생산에 사용되는 3가지 전략품목의 핵심소재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내렸다.

이어 지난 2일에는 일본과의 수출협력 우대국가를 의미하는 백색국가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한국을 제외하는 등 대한민국 미래 성장을 저해하기 위한 본격적인 경제침략에 나섰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지난 6월 오사카 G20정상회담을 주최한 의장국으로서 일본이 스스로 언급한 자유무역주의원칙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세계 정상이 모여 합의를 이뤄낸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 규범과 무역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다.

또한 WTO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부당하고 보복적 성격의 경제침탈로써 국가 간 경제협력과 우호관계를 훼손하여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행위로 국제사회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일본과의 여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제의했으나 일본은 번번이 사실왜곡과 거부로 일관해왔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서의 WTO 심의 승소에 강한 반발을 보이고, 해상 자위대 초계기 저공 위협비행을 하는 등 부당하고 불법적인 공세를 통해 우리 정부를 수차례 모욕해왔다.

이번 기습적인 경제침략 역시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과거의 만행을 되풀이하는 적반하장, 후안무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결국 아베 총리의 숙원인 평화헌법 폐기를 담은 헌법 개정을 통해 군국주의의 부활을 이뤄내어 한반도 평화를 저지하고 동북아 평화안보를 위협하며 패권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그간 아픈 과거를 딛고 호혜협력적인 한일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양국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일본의 경제보복규제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올해는 일제 식민지배에 항거한 민중들이 조국과 민족의 독립

을 외친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3.1운동 100주년에 벌어진 일본의 경제침략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제2의 독립운동 정신으로 서울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일본 정부는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세계 자유무역질서를 퇴보시키는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미래 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하여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피해자 배상판결을 존중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진심어린 사죄와 즉각적인 배상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3. 정부와 서울시는 일본의 명분 없는 수출규제조치로부터 관련 기업과 국민을 보호하고,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조치에 대해 엄중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9. 8.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